



또한 황명선 의원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제시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세계 주요 경제국 흐름과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비판하기도 했다.

황명선 의원은 “AI시대의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해 민주당은 당 강령에 기본사회 개념을 명시해 미래 사회 준비에 들어갔다”면서 “기재부가 지금부터라도 정파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를 위한 조세 정책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KDI는 ‘이르면 2030년에는 현재 형태의 일자리의 약 9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아시아개발은행은 ‘로봇과 AI의 적용은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IMF는 AI시대와 관련하여 ‘AI로부터의 이득이 공유된 번영으로 이어지게 보장하는 제도를 디자인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끝>

KDI 연구보고서 中

2030년 이후의 미래에는 기술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거의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030년에는 현재 형태의 일자리의 약 90%에서 직무의 9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How Robots and AI Will Impact Productivity, Trade, and Labor

Overall, the adoption of robots and AI will provide more advantages for capital owners and skilled workers and thus increase inequality.

전반적으로, 로봇과 AI의 적용은 자본 소유자들과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더 우위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불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23.07.20. 아시아개발은행 (ADB)

국회의원 **황명선**

23.12. IMF <Scenario Planning for an A(G)I Future>

The takeoff in output and the collapse in wages in the two AGI scenarios are both driven by the same force: the substitution of labor by comparatively more abundant machines. This suggests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design institutions that compensate workers for their income losses and ensure that the gains from AGI lead to shared prosperity.

2가지 AGI(범용적 인공지능) 시나리오에서의 생산량 도약과 임금 붕괴는 모두 비교적 더 흔한 기계가 희소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를 보상하고 AGI로부터의 이득이 공유된 번영으로 이어지게 보장하는 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회의원 황명선

셋째, 시장이 불완전하고 재분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는 현실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혁신은 혁신가에게 잉여가 돌아가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세 수단과 근로자에게 좀더 유리한 시장 배분을 가져오는 제도 변화, 보편적 기본소득 등 사회 안전망을 높이고 불평등 문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분배 방안이 필요하다.

2019. 김영식, 「AI와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최근 문헌 개관과 정책 함의」,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3호

국회의원 황명선